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로



정 관
대구교육대 총장

지금 대학에서는 신입생의 학력이 급격히 저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훌륭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그 바탕은 중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자면 제도상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을 법으로 구분하여도 그것이 별개로 움직일 수는 없다.

교육이 발전하자면 개혁을 해야 하고, 개혁은 앞날을 내다보고 장·단기로 구분하여 백년대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속히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적어도 OECD 국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학급 규모만은 최대 30명 이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낙후된 교육 여건 속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개혁은 개혁을 위한 개혁에 그쳐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잦은 장관의 교체와 장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이어져 왔다. 그 결과로 나타난 고등학교의 학력 저하, 이로 인하여 '희생자 세대'가 발생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 대학교육의 앞날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개혁의 충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시에 단행한 교원 정년 단축은 1998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학적 기초 조사도 없이 추진되었다. 교육행정 최고 책임자의 편향된 의지와 일부 여론에만 의존하여 강행되었기 때문이다.

심각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연차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전문가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교육 통계를 참고해서 시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묵살되었다. 그 결과 학교에는 혼란과 무질서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하여 교육이 파행을 걷는 현실에 당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한차례 획기적 정책 변경의 현상에 당면하게 되었다. OECD 국가 수준을 목표로 내건 '교육 여건 개선 추진 계획'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일시에 감축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3년간 1,208개 학교를 신설하고 2년만에 14,494학급을 증설한다고 되어 있다.

“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는 교사이며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곧 교육의 발전과 개혁은 교사 교육의 발전과 개혁이 기본이며 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실 증축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우수한 교사 양성이 더 중요한 문제임은 너무도 분명해진다.

”

2002년에 고등학교 5,220학급을, 2003년에는 초·중학교에 9,274학급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만 1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역사적으로 일시에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으로 놀랍고 고마운 교육 투자이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계획적, 단계적, 안정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부족한 교실을 학교의 옥상에 철골조로 증설한다는 계획이 대통령 보고자료에 들어 있다. 옥상의 철골조 건축이 영구 시설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특별 교실을 없애고 운동장 축소를 유도하는 계획은 실험실 구경도 못하는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고등학교를 35명으로 제한하여 편성할 때, 36학급 수준의 도시 고등학교는 8~10개 교실을 증축해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증축은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현재에도 넉넉하지 못한 필수 교육 시설을 훼손할 염려도 있다. 더구나 장기적 목표는 35명이 아니고 30명선 이하로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학교를 증설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이 초·중학교로 확대된다면 더 큰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이란 특별 교실 하나 없이 학생 수만 소규모로 감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소규모 학급의 수업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다른 여건을 훼손한 소규모 학급은 고등학교 기본 교육을 부실하게 하여 대학교육의 기초마저 흔들 염려가 있다.

요컨대 학교의 신설이든 학급 증설이든 간에 2년 내지 3년으로 획기적 변화를 주려는 교육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교육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의 수립이 순간적 발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해도 문제를 내포한다.

백년대계로 수립되어야 할 교육정책은 한낱 가시적 통계 수치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는 교사이며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곧 교육의 발전과 개혁은 교사 교육의 발전과 개혁이 기본이며 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실 증축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우수한 교사 양성이 더 중요한 문제임은 너무도 분명해진다.

OECD 국가 수준의 교육 여건 개선은 빠른 시일 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시행되어야지 단시일에 일시적으로 시행되서는 아니될 것이다. 학생 수의 감축은 매년 1~2명씩 점차적으로 줄여 가는 정책이라야 한다. 